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호연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6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9월 14일

발 의 자: 서호연, 곽향기, 김길영,  
김종길, 김혜영, 박 석,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병윤, 이새날, 정지웅,  
황철규 의원(13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최근까지 서울특별시는 여성 권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에 불과한 실정임.
-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더욱이 청소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이 아닌 ‘자살’이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아동 학대’ 등이 꼽히고 있음.

- 교권 침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아동 학대 방지’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 훈계조차 금지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99%가 학부모와 학생 등 다른 교육환경 구성원으로부터 갑질과 폭력 등의 형태로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 학생들 역시 입시에만 매몰돼 전인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 저변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하여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로 주목해온 장애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제도와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임.
-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현시점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3. 이송처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 제10조를 포함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경제포럼에 따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고 있고, 여성혐오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등의 사유로 사지에 내몰려 청소년 사망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살이 꼽히고 있다.
- 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도와 훈육이 금지당한 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전인적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경쟁적 입시환경과 학교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노숙인 등 전통적으로 주목했던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요구에 우리 사회 제도와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全)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아닌 개별적인 접근 방식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시민사회 모든 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3.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